

경기회복의 진단과 경제운용 과제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최근들어 일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거의 모든 지표들이 뚜렷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전세가 과연 진정한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 논의가 불거질 정도로 최근의 호전세 지속여부는 그 강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대외여건을 이겨낼 만큼 견실한 회복인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경제전반의 호전에 기초한 경기회복의 가능성보다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일이 나쁜 경제성장에 우리 스스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과연 이러한 지표호전이 경기회복을 뜻하는 것인지를 지출부문별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이다.

2. 민간 소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1/4분기의 성장요인 중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엇보다

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이다. 실제 지난 1/4분기의 성장내용을 보면 4.6% 성장중 소비와 재고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3.2%와 5.1%에 달한 반면 소비와 재고를 뺀 투자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1%(기타부문 기여도 -0.6%)에 그쳤다.

'99년의 성장이 소비와 재고조정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의 회복세 유지여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높은 소비증가세가 연중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다소 불투명하다.

첫째, 최근의 소비지출 증가가 실물부문의 회복에 힘입은 생산활동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다. 즉, 하반기에는 인플레이 우려로 현재의 경기진작 강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과 기업수익성 개선에 기초한 경기회복이 구조조정의 부담과 불안한 외부여건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된다.

둘째, 지난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0.5%)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8.9%나 증가한 점은 최근의 소비증가가 실물요인의 회

〈표-1〉 1/4분기 근로자기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비증가율(전년동기대비)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 득	3.7	-5.0	-4.6	-4.8	-4.3	-3.5	-3.1	-2.5	-2.2	7.8
소 비	-1.9	13.9	10.1	5.9	9.3	5.3	7.8	11.0	15.0	7.6

〈표-2〉 근로자기구의 순부채변화율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98년 소 득	-1.2	-4.7	-3.2	-6.6	-5.8	-6.1	-7.0	-7.5	-4.2	-7.0
'99¼분기 소비	-10.7	3.5	4.3	4.2	0.6	7.8	-2.8	-2.5	-2.4	-5.4

※ 주 1) 순부채변화율 = (부채증가 - 부채감소) / 소득의 비율임.

2) 자료 : 통계청.

복보다는 자산인플레이(주가급등)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1〉)

셋째, 현재의 소비증가세가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향후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 즉,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기구의 거의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 근로자기구와 자영업자에 편중되어 소비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거의 모든 계층이 가계부문의 부채를 축소해 나갔으나 올해 들어 증산층 이하 계층의 경우 부채증가가 두드러져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증산층 이하 저소득가구의 가계부문 부실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넷째, 거시여건의 변화로 그 동안 소비증가에 기여하였던 정책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의 소비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자산 인플레이션을 통한 소비증가가 미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선회가능성으로 한계에 부딪혔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비회복세가 크게 부각되는 점은 향후 경기의 버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소비증가는 경제활동의 성과가 소득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에 따른 자산효과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누린 고소득층의 불로소득 증가와 위기직후의 과도한 소비조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호전세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 직업창출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증산층의 붕괴가 어느 정도 복원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속될 수 있다.

3. 설비 투자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지표상으로는 일부 관찰되고 있다. 비록 공공부문의 발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기계수주가 4월중 23.6% 신장하였고 운수장비, 컴퓨터관련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도 전년동월에 비해 29.4% 늘어났다. 설비투자야말로 우리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투자자체의 회복은 바람직한 발전이다.

그러나 최근의 설비투자 회복기미가 산업전반에

걸친 고른 수요회복에 기초한다기 보다는 일부업종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며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특히 교역조건(terms of trade : 수출단가/수입단가)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위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운 유망부문의 발굴이나 관련부문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조차 위기이후의 경제여건 호전속에서 미래에 대한 경쟁체제 구축보다는 아직도 현 구도하에서 사업확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아직도 심각한 과잉설비 문제를 안고 있다. <표-3>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산업의 경우 빅딜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과잉투자가 일시적 실업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비인적자원에 대한 과잉투자는 수년간에 걸친 과잉설비의 매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위기를 계기로 대량실업의 형태로 구현된 반면 정작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던 재벌기업들의 자산매각 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기는 하나 아직도 해당업체들의 과잉설비 매각은 부진한 실정이며 이는 대부분 시장형성 가격의 형성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호전이 이들 업종에 대한 충

분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과잉설비 업종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위기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설비투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래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 결과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지금까지의 투자 회복세는 중소기업들이 재고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한계 또는 대체투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투자자체의 회복여부보다는 유망 성장업종의 발굴여부와 이에 대한 분별있는 투자전략의 구사이다.

사실 설비투자에 관련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문제는 잘못된 투자를 시정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저리자금융자 혜택은 건전성 감독이 크게 강화된 현 금융권의 변화를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려우나 투자 결정이야말로 향후 경쟁력의 제고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표상의 호전을 두고 방심해서는 안되며 경쟁력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투자결정 과정의 정착을 통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자본흐름이 자유로운 가운데 일정수준의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기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이다.

<표-3> 주요 제조업종별 유휴설비 보유율 현황

(단위 : %)

	제조업전체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조선
97 하반기	16.4	36.0	16.9	10.0	9.3	8.9	6.2
98 상반기	24.1	56.4	30.0	16.7	16.4	14.2	4.0

※ 자료 : 산업은행, 「99년 설비투자 계획조사」.

〈표-4〉 건설관련 주요통계 증가율

(단위 : %)

	1997년	1998년				1999년		
	연 간	1/4	2/4	3/4	4/4	연 간	1/4	4 월
국내 건설수주	5.4	-23.4	-53.4	-44.8	-44.9	-42.5	-45.3	39.3
(공공 부문)	7.6	-11.0	-13.8	-8.4	-36.7	-21.4	-53.8	82.7
(민간 부문)	-5.9	-41.0	-67.7	-65.7	-56.5	-57.6	-30.7	7.0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8	-66.1	-55.0	-45.8	4.1
(주거용)	2.6	-3.2	-56.7	-63.2	-63.7	-50.3	-55.0	-4.0
(상업용)	3.9	-47.8	-65.9	-77.0	-81.0	-68.6	-39.8	24.0
(공업용)	-26.2	-67.8	-72.9	-69.4	-60.9	-68.2	24.2	64.5

4. 건설 투자

지난 1/4분기 중에도 동행 및 선행지표 모두 감소 폭이 진정되지 못한 건설투자관련 지표들이 지난 4월중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되어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지표 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을 제외하고 공업용·상업용의 경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특히 공업용의 경우 지난 4월중 64.5%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국내 건설수주도 지난 1/4분기 중 45.3%의 감소에 이어 지난 4월중 39.3%의 증가세로 급반전되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건설투자는 반경기적(counter-cyclical) 기능이 강조되어 경기안정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위기이후 침체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부문이어서 최근의 회복세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표-4〉)

그러나 전반적인 호전기미와는 달리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의 지속으로 증시에 몰린 자금이 이제 부동산시장으로 이탈할 조짐마저 나타

나고 있다. 경기회복 초기단계에 증시활황이 산업자 금화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흐르면 80년대 경험처럼 투기확산과 함께 경제의 버블화가 진행되고 결국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 5차 동시 분양을 비롯 용인, 수원 등에서 신규 아파트만 몇 만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분양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매매 가격도 지난해 12월 이후 올 4월까지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조짐도 일부 엿보인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해 2/4분기 중 11만2천호에서 지난 4월중 8만4천호로 무려 28만호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IMF 직전의 83.7%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표-5〉)

물론 최근의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난해의 과도한 위축 이후 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표-5〉 주택관련 지표추이

(단위 : 전월대비, %)

	1998	1995. 4	2 / 4	3 / 4	4 / 4	12	1999. 1	2	3	4
매 매 가격 상승률	-12.4	-5.5	-6.7	-0.7	-0.8	0.3	1.2	0.2	0.3	0.1
전 세 가격 상승률	-18.4	-2.4	-11.0	-0.3	-0.9	0.3	2.1	2.8	2.0	1.4
미분양아파트(천호)	103	101	112	110	106	103	97	93	88	84

결과로 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향이 우려된다.

건설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당국의 자산디플레이 억제정책이 부분적인 과열양상으로 이어져 특정집단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대다수 투자가의 잠재적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높인다는데 있다.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의 결과 주가시장에서 나타났던 소위 "묻지마 투자"가 자칫 부동산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거품경제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경기진작 노력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이어져 미래 생산능력 확충에 기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의 부실요인을 키우는 셈이며 이는 납세자의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위기이후 통상적인 경기부양 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떠맡은 이유는 바로 건설한 경제토대를 이루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5. 생산부문 양극화 문제

4월 들어 산업생산이 무려 17.1%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 적어도 생산면에서 전년도의 침체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신장세는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경기 활성화 노력이 반영되기 시작했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위기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던 비효율적이고 취약한 산업구조에 다시 의존하여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기이후 대부분의 도산기업들이 중소기업군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표호전이 경기부양 효과가 집중된 대기업 재벌그룹 중심의 생산활동 회복에 주로 기인함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분명 과잉설비 문제가 남아있는 5대 주요 수출업종에 의존한 생산패턴이 위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근본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각오와 노력이 요구됨을 일깨워 준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산업에 대한 비중이나 경쟁력 면에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나 재벌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양적 회복에 큰 비중을 둘 경우 산업생산에 있어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 현재의 산업구조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경기 양극화 현상이다. 물론 경기회복 초기에는 몇몇 업종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통례이나 위기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수치상의 회복에만 치중할 경우 현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이 그대로 방치되는 불안한 회복

의 가능성이 높다.

전산업 기준 산업생산의 경우 지난 1/4분기 중 월 평균 1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주요업종을 제외할 경우 산업생산 증가율은 4.2%로 1/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1/4분기 중에도 22.9%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지난해에 30~40%의 생산 감소세를 보인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세가 전산업으로 확산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둘째, 최근 회복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마저 상당한 구조조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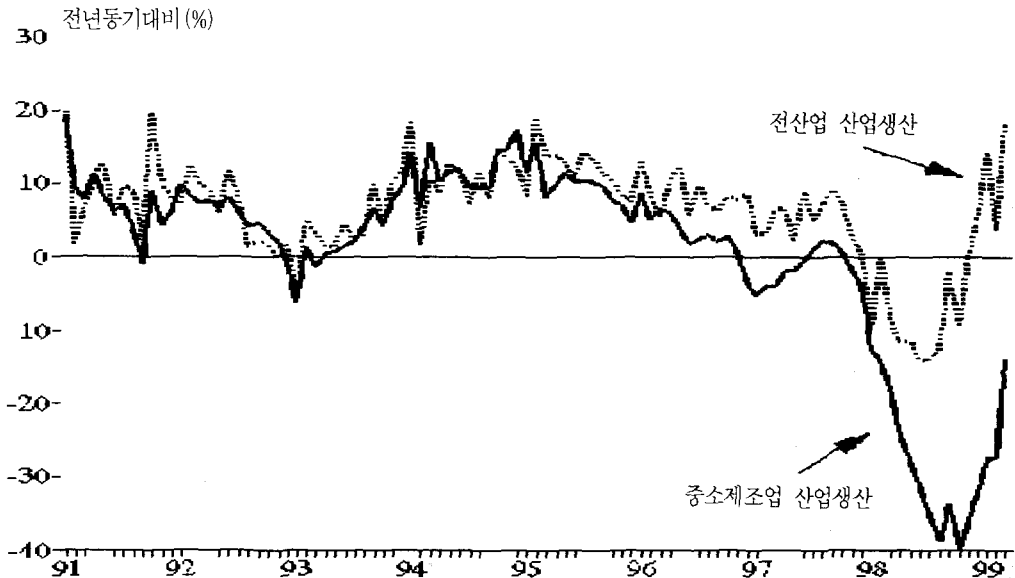
특히 생산 감소세와 더불어 '99년 들어 중소기업의 판매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거시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디플레이 압력하에서 가격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판매가격 하락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6>)

그동안 수없이 강조된 중소기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현재의 엄청난 국제적 환경변화가 개별단위의 경쟁력 평가를 기초로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까운 미래에 경쟁력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이제 최우선 국가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생산면에서의 경기 양극화는 결국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산업구조의 다변화는 앞으로 우리 나라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깨닫게 해준다.



<그림-1> 전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표-6〉 전산업 및 주요 업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1997년	1998년				1999년	
	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1/4분기
전 산 업	5.3	-6.2	-12.2	-9.5	-1.6	-7.3	12.5
4개업종 제외	1.4	-14.6	-20.7	-19.6	-13.8	-17.2	4.2
4 개 업 종	33.7	47.4	36.7	42.0	54.6	45.2	41.6
중 소 제 조 업	-1.4	-15.1	-28.1	-35.9	-35.9	-28.9	-22.9

※ 주 : 4개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무선통신장치, 선박 건조업임.

6. 수출·수입

1~5월중 수출은 534억불(3.8% 감소), 수입은 441억불(11.9% 증가), 무역수지는 93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수입규제와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품목도 있지만 주력품목이 호조를 보이고 對선진국 수출도 호전되어 '99. 1월(2.9%) 이후 처음으로 5월 증가세(2.2%)를 시현하였다.

수입은 5월중 '96년 1월(34.4%) 이후 최대 증가율인 25.0%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수용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때 수출은 외부환경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환율의 신축성이 허용되는 한 그런대로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경기둔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돌출하지 않는다면, 올해 무역수지는 올 정부 연간목표 200억불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이후 우리경제를 지탱했던 순수출은 실질환율의 안정으로 성장 기여도면에서 '99년 중 크게 약화될 것이며 성장주도 부문으로서 오히려 내수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의 수출여건은 불안요인 및 호전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호전요인으로는 아시안 경제의 부분적 회복조짐, 국내 금리 및 임금 안정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90~'96년 평균수입의 성장탄력성이 미국 1.9, 영국 1.8, 아시아 2.33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지역의 회복세가 좀더 지속될 경우 환율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수출증가세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수출관련 불안요인으로는 노사불안, 구조조정 마무리 지연 등 국내적 요인과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엔화약세, 일부 품목들의 단가하락,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중동, 동구 및 CIS 경제의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 등 해외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목이 5대 주력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으며 수입의 경우 사치재 수입이 늘어나 수출입 통계면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말해준다. 즉, 단기적인 호전세가 반영된 수출입 통계에서 우리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노리려는 전략적 대응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면에서는 무역거래 기반확충, 시장 개척활동 강화, 산업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대응 및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으로 총력수출 노력

〈표-7〉 '99. 1~5월 수출입 동향

	99. 1월	2월	3월	1/4	4월	5월	99. 1~5
• 수출(백만불)	9,266	9,344	11,720	30,330	11,588	11,556	53,474
(증가율, %)	2.9	-16.7	-2.4	-5.9	-3.9	2.2	-3.8
• 수입(백만불)	8,631	7,638	9,303	25,572	9,087	9,484	44,143
(증가율, %)	15.4	-3.1	12.2	8.1	10.7	25.0	11.9

※ 자료 : 산업자원부.

의 경주가 필요하며 수입면에서는 일평균 수입액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1월 수준에 이미 도달한 소비재 수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대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출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면서도 우리의 수출은 당국의 환율안정 노력에 기초한 인위적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바 크며 수출입 구조도 수십년간 거의 비슷하게 단순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아직은 소수의 선진국 위주로 변화가 주도되면서 그 파장을 실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향후의 첨단화된 무역환경에서 우리수출이 성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려면 상품의 종류의 다양화나 질의 향상은 물론 무형적 자원인 서비스거래의 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지금은 금융거래 규모가 실물거래 규모의 5배 이상인 현재의 환경변화나 엔/달러 환율에 특히 민감한 우리의 취약한 대외경쟁력을 감안할 때 종래의 비교적 단순한 상품 수출입 구조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용역·기술관련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 첨단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7.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실물부문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이면에는 단기적인 정책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 즉, 경기양극화에서 나타난 구조조정 필요성과 소득 불균형 심화나 절대빈곤층 확산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호전에 도취되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노력과 처방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경제는 자본유출입의 방향이나 규모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하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계속 발표될 거시지표의 호전세는 위기극복의 촉매를 들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뜻한다. 즉, 우리 모두는 모처럼 허용된 귀중한 기회를 부디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선진경제의 대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현재의 위기수습 과정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